



문서번호 : 17-6-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3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제 목 :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전송일자 : 2017. 6. 28.(수)

전송매수 : 총 8 매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닦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 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1. 지난해 4월 8일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중국 Ningbo성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한 경우, 북측 가족의 신변보호나 외교마찰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입국부터 사회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집단 탈북' 사실을 입국 바로 다음날 발표한 이 사안의 경우, 총선을 닷새 앞둔 상황에서 북풍용으로 이루어진 이례적인 공개였습니다.

이후 북측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UN 인권이사회 의장과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딸들을 돌려달라며 호소하였고,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종업원들도 CNN과의 인터뷰 등에서 동료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한류문화를 동경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부모들이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보겠다며 판문점에서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였다는 소식만 알려졌을 뿐, 입국 경위와 이들의 신변,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입장 발표'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TF'라고 합니다)은 5월 16일 국정원장에 대하여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신청과 물품 등 접수 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였습니다. 민변 TF 뿐만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단체에서도 여러 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근거 없이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

었던 것입니다.

이후 민변 TF에서는 북측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서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법 절차를 통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북측 가족들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후에도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각 거부행위에 대하여 준항고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UN에 긴급청원과 개인진정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자'인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신변과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법적 근거 없이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요청마저도 거부되었습니다.

3. 그러던 중 국정원은 2016년 6월 종업원들이 모두 '보호결정'을 받았고, 8월 중순경 퇴소하여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정원 관계자의 말과 재판진행과정에서 국정원장 명의로 제출된 확인서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보호결정' 후에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 입소하여 정착 및 지원 교육을 받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계속해서 국정원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발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신변이나 의사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함께 입국하였던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의 소재

를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신구제청구와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의 재판부는 국정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 4. 8. 통일부,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 일하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 4월 5일 밤 중국식당을 빠져 나와 6일 새벽 말레이시아를 거쳐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힘
- 4. 12. 북측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첫 공식입장 발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 납치행위”라고 주장, “사죄와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
- 4. 12. 통일부 대변인 논평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 4. 15. 북측 <우리민족끼리>는 ‘국가정보원이 중국 식당의 지배인을 매수,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계획적인 유인납치극을 실행했다’고 주장
- 4. 18. 여종업원 부모들이 UN인권이사회 의장과 인권최고대표에 서한을 보내 ‘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 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
- 4. 18.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종업원들이 평양에서 CNN과 인터뷰를 하고 ‘동료들이 납치됐다’고 주장
- 4. 18.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유인. 납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
- 4. 21. 북측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종업원들과 가족의 대면을 요구하며 가족을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냄
- 4. 22. 통일부 입장자료 통해 ‘가족 대면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4. 19~22. 북측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등 각계가 ‘유인납치된 우리 여성, 노동자, 가족에 대해 무조건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
- 4. 24. 북측 <우리민족끼리TV>, 류경식당에서 함께 일한 다른 종업원 7명 인터뷰영상을 공개
- 4. 27. 북측 <우리민족끼리TV>, 종업원 가족 인터뷰 영상 공개

- 5. 9. NK투데이, 북측 여성 12명 중 한 명 단식도중 사망하였다는 소식 단독보도
- 5. 10.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성명발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탈북 사건 관련 의혹 신속히 규명돼야한다.”
- 5. 12. 민변 통일위원회, 이번 집단탈북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 위해 천병윤 국정원 대변인에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신청
- 5. 16.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번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외부인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 북한의 한 매체가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이 금식을 하다가 1명이 사망했다고 최근 보도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집단 탈북 북한식당 종업원의) 건강상태는 좋다" 고 밝힘.
- 5. 16. 민변 변호인단 구성. 종업원들에 대한 긴급접견 기자회견 및 접견신청, 국정원의 접견 거부 (이후 6. 15.까지 총6차례에 걸쳐 접견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
- 5. 19. 북측 가족 중국 칭화대 정기열 교수 통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위임장 민변으로 보내움
-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제기
- 6. 3. 변호인단, 종업원들의 가족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관련 통일부 면담
- 6. 8. 통일부, 변호인단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 6. 13.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권 요구하는 긴급청원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기
- 6. 23. 변호인단, 국가정보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 7.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
- 7. 12. 국제엠네스티,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 8. 12. 변호인단, 국가정보원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8. 24. UN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 제기
- 9. 9.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
- 2017. 1. 19. UN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 제기
- 3. 26. '종업원들의 대학 특례입학' 언론보도
- 4. 1.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탈북 종업원들 송환 촉구
- 5. 25. 우리민족끼리TV, 종업원 리지에 아버지 유언영상공개 및 사망사실보도
- 6. 7.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해외식당 종업원 송환 없이 이산가족 상봉 없다"

4.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중

업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들의 신변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과 통일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에 관한 모든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딸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500일 넘는 시간을 보내야했던 북측의 가족들은 지금도 딸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싶은 것이 종업원들의 의사라면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가족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들의 신변을 국정원과 통일부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하여서도 종업원들의 신변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업원 중 1명인 리지예의 아버지는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이라 할지라도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경우에도 변호인, 종교인, 가족과의 접견교통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통일부의 설명대로 종업원들이 '한류를 동경하여' 입국하였다면 입국 이후 이토록 오랜 시간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근거도 명분도 없습니다.

5. 이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총선을 닷새 앞두고 있었던 집단 입국 사실의 이례적 발표, 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고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점, 국정원

에 의해서가 아니면 신변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철저한 관리 하에 은폐되어 온 이 사건은 국정원 개혁, 적폐청산, 인권 존중을 중요한 과제로 확인한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그리고 우선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이에 민변 TF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및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입소 경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서의 생활 실태,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 및 진정한 의사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TF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귀중